

2022년도 수산 관련 예산 개산 결정에 관한 주요 사항

~해양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지속적인 수산업을 추진~

1. 어업 경영 안정 대책의 착실한 실시와 새로운 자원 관리 시스템의 추진

(1) 어업 경영 안정 대책의 착실한 실시[당초: 338억 엔, 보정: 681억 엔]

- 계획적으로 자원 관리 등을 추진하는 어업자를 대상으로 한 어업 수입 안정 대책(적립금 지급 등)을 실시[당초: 20억 엔, 보정: 59억 엔]
※보정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증가분 160억 엔이 포함되어 있다.
- 연료유나 배합 사료 가격 상승의 비용 대책을 실시[당초: 18억 엔, 보정: 8억 엔]

(2) 자원 조사 평가의 확충[당초: 95억 엔, 보정: 13억 엔]

- 조사선 조사나 어업자의 협력에 의한 어선 활용형 조사의 실시 등 자원 평가의 추진 및 고도화
- 어획량 데이터 수집 대상 시장의 확충(200→400)과 2022년도의 시행에 대비한 수산 유통 적정화법 관련 정보 전달의 전자화 추진

2. 코로나 재난과 해양 환경 변화 등의 상황에서 수산업의 성장 산업화 촉진

(1) 어업·어촌을 뒷받침하는 인재의 육성·확보[당초: 6억 엔, 보정: 1억 엔]

- 어업 취업 전의 청년에 대한 자금 교부, 어업 현장에서의 장기 연수, 어업자의 경영 능력 향상 등을 지원

(2) 연안 어업의 경쟁력 강화

- 해안 활력 재생 및 성장 촉진 교부금 등[당초: 27억 엔, 보정: 45억 엔]
어업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는 어업자에 의한 공동 이용 시설,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 어업권 침해 방지 대책 등 해안 플랜의 착실한 추진
- 어선 등의 리스 방식을 통한 도입 지원[당초: 25억 엔, 보정: 256억 엔(소요액)]
홍어 문제 대응 및 환경 부하의 경감 등 해안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어선 등의 리스 방식을 통한 도입 지원

(3) 연안·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 어업 구조 개혁 종합 대책 사업[당초: 2억 엔, 보정: 65억 엔]
CO2 배출 저감에 대응하면서 수익을 내는 어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고성능 어선의 도입 등을 통한 수익성 향상, 홍어 대응책으로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조업·생산 체제의 실증을 추진

(4) 양식업의 성장 산업화

- 먹이, 종묘, 어장에 관한 기술 개발·조사를 지원[당초: 3억 엔]
- ICT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연안 양식 시스템의 실증, 시장 니즈에 따라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식의 실증 등 수익성 향상 대책 등을 지원[당초: 20억 엔 내, 보정: 65억 엔 내]

(5) 내수면 및 연어·송어 등 자원 대책[당초: 14억 엔]

-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관리 형태 검토, 장어 등 내수면 자원의 적절한 관리 체제 구축, 연어 회귀를 향상에 필요한 방류 체제로의 전환 등의 대책을 지원

(6) 어협의 경영 사업 개선 대책 추진[당초: 3억 엔, 보정: 6억 엔]

- 광역 합병이나 사업 제휴 등을 추진하는 어협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파견, 홍어 등에 의한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원활화 등 경영 기반 강화 대책 등을 지원

3. 경쟁력 있는 가공·유통 구조의 확립과 수산물 수요 환기

수산 밸류에이션의 생산성 향상[당초: 6억 엔, 보정: 20억 엔]

- 생산·가공·유통·판매가 연계하여 시장 니즈에 부응하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첨단 기술의 활용 등을 지원
- 수산 가공업자 등에 대한 원재료 공급의 평준화 대책 및 코로나 대책으로서 수산물 재고 적체를 감안하여 적체된 어종의 보관료, 운반료 등을 지원
- '새로운 생활 양식' 등을 감안한 신상품 개발 및 소비자의 수요를 환기하는 정보 발신 등 수산물 소비 확대 대책을 지원

4. 수산 기반의 정비, 어항 기능의 재편·집약화 및 강인화의 추진

(1) 수산 기반 정비 사업 <공공> [당초: 727억 엔, 보정: 270억 엔]

- 거점 어항 등의 대형 어선 도입, ICT 기술 활용에 대응한 유통 기능 강화와 양식 거점 정비, 어항 이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수산업의 성장 산업화를 추진
- 환경 변화에 대응한 어장이나 조장·간석지의 보전 및 정비
- 어항 시설의 내진·내해일·장수명화 등 어업 지역의 방재·감재·국토 강인화

(2) 어항의 기능 증진·어촌의 활성화

- 어항 기능의 재편과 '해업' 진흥을 위한 어항 이용의 적정화, 어항의 친환경화에 기여하는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어촌의 활성화를 추진[당초: 6억 엔, 보정: 1억 엔]

(3) 농산어촌 지역 정비 교부금 <공공> [당초: 784억 엔 내]

- 지방의 재량으로 실시하는 농림 수산업 기반 정비(어촌 환경 정비 포함) 나 농산어촌의 방재·감재 대책에 필요한 교부금을 교부

(4) 해안 제방 등의 대책, 어항 관련 재해 복구 등 사업 <공공>

- 제방 정비, 보강 등이나 해안 보전 시설의 개수 등[당초: 36억 엔, 보정: 7억 엔]
- 재해를 입은 어항 시설 등의 복구 등을 실시·지원 (보정에는 부석 대책을 포함)
[당초: 12억 엔, 보정: 44억 엔]

5. 외국 어선 대책, 다면적 기능의 발휘, 포경 대책

(1) 외국 어선 대책 등[당초: 149억 엔, 보정: 50억 엔]

- 일본 주변 수역 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어업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어업자가 진행하는 외국 어선의 조업 상황 조사·감시 등을 지원

(2) 수산 다면적 기능의 발휘 등[당초: 42억 엔, 보정: 15억 엔]

- 어업자 등이 행하는 조장·간석지의 보전, 국경 감시, 홋카이도의 적조 발생 대응 및 재해 대응, 낙도 어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장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을 지원
- 유해 생물·적조 등에 의한 어업 피해 방지 및 영양염 대책(대상을 도쿄만 및 이세·미카와만으로 확대) 등을 지원

(3) 포경 대책[당초: 51억 엔](소요액)

- 포경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실증 사업, 고래류 과학 조사에 의한 과학적 데이터 수집, 고래고기 보급 관련 정보 발신 등을 지원